

“적정한 용역대가로 도시계획 품질 ↑... 산출기준 마련”

서울시 용역수행 기피 대응책 마련

이달 중 표준품셈 기준 수립·배포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

서울시가 도시계획·재생분야의 용역대가 산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업 예산에 맞춘 낮은 용역 대가로 인해 업체들이 서울시의 용역수행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표준품셈 대가 산출 기준’을 수립해 배포한다.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재생 업무분야별 용역 대가 산출 기준을 마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표준품셈이란 재료비, 인건비, 기계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공사의 예정 가격을 쉼하여 정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 조사의 6개 분야에서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해 공표했다.

대부분의 기술용역은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대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나 국토계획 등은 객관적인 용역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력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계획·재생분야의 경우 세출 예산 편성 한도 내에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용역대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표준품셈 대비 낮은 수준의 용역 대가를 적용, 업체들이 서울시의 용역을 맡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사업 예산에 맞춘 임의 요율 적용으로 낮은 대가를 산정, 용역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며 “또 과업 면적이 상이함에도 용역비를 차등 없이 산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용역 특성상 복잡한 도시형상 등으로 난이도가 높고 창의성이 필요해 요구 수준이 높은데도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아 업체들이 용역수행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업무특성별 요율(비중)을 적용한 적정 투입 인력수를 산정하는 등 도시계획·재생분야의 용역 대가 기준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용역 계약관리 방식도 손질한다. 우선 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관행을 개선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별도의 제안서와 PPT 작성으로 참여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보상은 제도가 부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용역 시행 방침을 세울 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외에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 등 과업 특성에 맞는 계약방식을 검토한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시 입찰 서류를 간소화해 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 입찰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등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해 반영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통보할 것”이라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때 서울시 대가 기준 미준수 시 요청권을 보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 딥체인지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딥체인지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서 어린이들이 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천막 철거비 전액 회수

(2억 6000만원)

우리공화당 1억1000만원 시에 송금 시, 자진 완납에 소송 취하 예정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 2억6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냈다. 서울시가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지난해 6월 25일 이후 192일 만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을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총 2억6700여만원의 변상금을 완납하게 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했다. 첫 행정대집행이 있기까지 46일을 버텼고, 대집행 직후 다시 천막을 쳤다.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 16



작년 9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 3개동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

일에는 천막을 거둬가면서 “우리가치고 싶을 때 친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차 대집행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시는 준비과정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분만 당에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우리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돈줄이 막힐 위험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대집행 비용을 청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이 보이자 미리 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시의 손배소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처법한 집행이므로 집행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우리공화당의 자진 완납에 따라 시는 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5등급 노후경유차 40% 감소

지난 해 16년만에 최대 감소

경기지역에 등록된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지난 한 해 40%가량인 17만여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6년 만에 최대 감소 실적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 경유차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6만1천919대로 2018년 12월 43만4천628대보다 39.7%인 17만2천713대가 감소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4천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요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본예산 1천102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천9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조기 폐차 9만8천514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만191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3대 등 모두 11만8708대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2016~2018년 3년 치 실적을 합친 11만7035대(2016년 3만1186대, 2017년 3만8904대, 2018년 4만6945대)를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도민 인식 변화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경유차 대수는 240만30대로 2018년 239만9774대보다 256대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217만6000여대, 2017년 229만여대, 2018년 23만9000여대 등 매년 1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안전신고 우수사례 778건 포상 지급

전문가 심사 거쳐 우수상·장려상 선정

서울시는 지난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우수사례 778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상으로 뽑힌 43명의 시민에게는 20만원, 장려상을 받은 735명에게는 3만원의 보상을 줬다.

2019년 서울시에 접수된 안전신고는 총 13만9114건이었다. 이 중 42%가 불법 주정차에 관한 신고였다. 지난해 4분

기에는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신고 9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 허술한 육교 시설물, 고장 난 신호등, 보도 점자블록 위 장애물 등을 신고한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로·보도블록·시설물 파손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기현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신고 사례. /서울시

로도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